

## 중국의 독점금지법 강화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 중국정부는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가 카르텔 체결로 인한 가격인상이 중국의 독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고 총 200억 엔의 벌금을 부과
- 최근 중국에서는 독금법에 의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 적발

- 중국정부는 ‘14.8.20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명령

- 덴소, 미쓰비시전기, 야자키총업, 일본정공 등 10사는 가격 카르텔로 자동차부품 가격을 인상시킨 혐의로 총 200억 엔의 벌금을 부과

\* 벌금액은 각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한 해당제품 연간 매출액의 4~8%에 상당

- 중국정부는 적발된 일본기업들이 발전기, 케이블 하니스, 베어링 등 10년 이상 담합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와 후지코시는 중국 당국이 8월초부터 실시한 조사에 협력적이었다는 이유로 벌금은 면제

<중국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일본기업>

기 업 명	벌금(억엔)
스미토모전기공업	48
야자키총업	40
일본정공	29
덴소	25
NTN	19
제이텍트	18
미쓰비시전기	7.5
미쓰바	6.8
후루카와전기공업	5.7
아이산공업	4.9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면제
후지코시	면제

### □ 중국의 독금법 위반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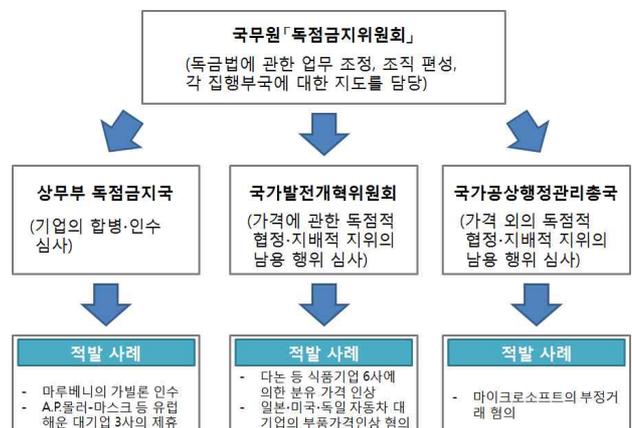
- 중국정부는 ‘08.8.1부터 독점금지법을 시행(‘07.8월 발효), WTO나 국제사회에 중국이 시장경제국가라는 것을 각인
- 독금법은 (1)카르텔 금지, (2)시장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금지, (3)기업 M&A의 사전 심사, (4)행정 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의 제한 등 4 가지 요소로 구성

- 중국정부는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계 대기업을 단속하기 시작
  - ‘13.1월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기업과 대만의 액정패널 기업이 가격 카르텔을 맺은 혐의로 적발 당했음
  - 닛케이신문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중국기업의 가격 카르텔을 중심으로 단속해 온 경험이 축적하여, 지금은 외국계 대기업을 심사할 수 있는 만큼 법의 운용에 익숙해졌다고 분석

<중국정부에 의한 외국기업 적발 사례>

'13.1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기업과 대만의 액정패널 기업 6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 총 49억 엔의 벌금 부과	'14.6	A.P. 몰러-머스크(덴마크) 등 유럽 해운 기업 3사를 아시아-유럽 항로 세어의 금상승을 이유로 제휴를 불인정
'13.4	마루베니의 미국 곡물 대기업 인수로 지배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 중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제한	'14.7	도요타자동차와 중국현지 합작기업에 대해 하이브리드차용 전지의 사외 판매를 명령
'13.8	다논(佛), 미드 존슨(美) 등 식품 대기업 6사의 지나친 분유 가격 인상을 적발, 총 106억 엔의 벌금 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
'13.11	미국 반도체 대기업 쉘컴을 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14.8	폭스바겐(獨), 크라이슬러(美),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 등 자동차 대기업들을 보수용 부품 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14.2	쉘컴을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		일본 부품기업 12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 총 200억 엔의 벌금 부과
'14.4	마이크로소프트(美)의 노키아 인수로 지배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 특허 남용 금지 등 조건 부여	'14.9	아우디와 다임러(獨), 크라이슬러에 대해 가격 부정 인상을 적발, 총 54억 엔의 벌금 부과
'14.5	니콘, 에실로(佛), 칼자이스(獨) 등 렌즈 기업 5사를 가격 인상으로 적발, 총 3억 2000만 엔의 벌금 부과		일본 자동차 기업 1사를 부품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 중국의 독금법 관련 업무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기관이 담당
  - 최근 외국계 기업에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요하는 이유는 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임
  -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IT,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국산(중국산) 제품의 이용을 장려하는 「중국의 꿈」 전략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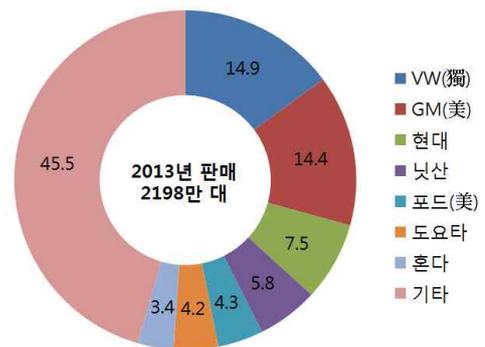
- 단속 대상 분야가 액정 패널이나 스마트폰용 반도체, 자동차 등 중국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의도적인 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음

\* 중국 자동차시장의 50% 이상은 외국 자동차가 차지

- 이에 대해 중국EU상공회의소는 긴급성명을 발표, 자동차 관련 중국기업이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단속의 공평성을 비판

- 하지만 중국정부는 고급 외제차의 가격이 본국 제품보다 2~3배 비싸 상품 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통해 「소비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

중국 자동차 시장 기업별 판매 세어(2013, %)



자료 : 동양경제(2014.9.20)

## □ 일본기업의 대응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본 자동차부품기업들에 대해 (1)중국의 법률에 따라 판매 정책과 판매 행위를 재검토, (2)전 직원에 독금법 관련 교육을 실시, (3)소비자의 이익에 공헌하는 행동을 취할 것 등 회사 체제의 재검토를 추진

- 모든 기업들이 내용 확인과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14년도 실적에 대한 영향과 코멘트, 반성문 등을 발표

-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은 부품 가격을 평균 20% 정도 인하하였지만 인하 대상 범위가 전체 부품의 수십 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성 자동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

\* 도요타자동차는 렉서스용 부품 약 1만 5,000개의 가격을 평균 26% 인하하기로 결정

○ 중국 당국이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도요타자동차와 혼다는 즉시 부품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

- 중국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수리 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 신속한 부품 가격의 인하는 '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회피하려는 대응으로 보임

## □ 시사점

- 일본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북미시장의 판매 강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 북미는 정치 리스크가 없고 '13년 미국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1560만대로 선진국에서 유일한 성장시장으로 부상
  - 북미시장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좋고 브랜드력도 높아, '14년에는 도요타 자동차나 닛산자동차의 판매가 대폭 증가할 전망
- '14.8월25일에는 인도에서도 독점금지당국이 국내외 자동차기업 14사에게 예비 부품의 판매 경쟁 방해 혐의로 총 440억 엔의 벌금을 부과
  - \* 단속 기업 : 타타모터스(印), 힌두스탄모터스(印), 마힌드라앤마힌드라(印), 혼다, 멀티·스즈키·인디아, 닛산자동차, 도요타자동차, 폭스바겐, 스코다(VW 자회사), BMW(獨), 메르세데스-벤츠(獨), 피아트(伊), 포드, GM
- 신흥국 시장은 성장성이 높다는 매력도 있지만 현지 진출 기업은 법무 체제의 강화 등 대책이 필요
- 담합이나 카르텔을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면 벌금 면제·감액을 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Lenieoncy)제도를 활용하면 히타치오토모티브스나 후지코시와 같이 행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하고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
- 한편, 중국의 독금법 운용은 국제 룰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성 있는 경쟁 환경으로 개선되어 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산케이신문(2008.8.4, 2014.8.16/22), 닛케이신문(2014.8.14/20/21/27, 9.12), 아사히신문(2014.8.18), 마이니치신문(2014.8.21), 주간 동양경제(2014.9.6/20), 다이아몬드 온라인(2014.8.25)